

“모든 논의 국회서” Vs “책임질 사람 있다”

여야 '조문정국' 이후 긴장감

여 “추모 행사 제2촛불 될라” 전전공공 야, 대통령 사과·법무장관 등 해임 추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충격에 빠진 민심은 29일 영결식 이후에도 상당 기간 요동칠 전망이다.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 “백악이 무효”라는 입장과 함께 초조한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후폭풍으로 지난해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나타났던 ‘촛불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적 추모 열기에 민주당의 ‘책임론 공세’가 덧

붙어질 경우 민심의 향배는 한 마디로 예측 불허 국면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조문정국이 6월 민주항쟁과 맞물려 ‘진보 총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집권 1기 국정 추동력 약화’라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해야 했던 여권이기에 때문에 ‘차질 집권 2기에서도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겹치면서 ‘내외외환’에 처한 점은 여권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민주당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책임론’에 무대응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영결식이 마무리되는대로 조문 정국을 장외에서 국회로 끌어 들어 그 파장을 최소화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놓고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로 밀어 붙였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 ‘상주’된 심정으로 조문에 집중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기가 상당한 상황이다.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일단 민주당은 27일 정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한대로 장례절차가 끝나는 내주부터 대어 강경대응으로 돌아설 태세다.

이를 통해 6월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반(反)MB’ 전선을 기치로 전통적

지지세력의 결집을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공식사과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등 수사라인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고려하고 있으며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회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경찰 부실수사 및 청와대 은폐 의혹 등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권에 국정기조 전면수정을 요구하면서 미디어 관련법 등에 대해 초강경으로 맞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사과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6월 국회 일정에 연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개회 협상부터 진통을 겪을 공산이 커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참여정부때 ‘청계천 지원’ 등 우호적 대선정국 이후 정치행보 갈려 대립

MB-盧 ‘엇갈린 인연’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엄수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한다.

1년 3개월전 대통령직을 주고받은 이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유년기와 청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고를 졸업, 각각 재계와 법조계에서 자수성가해 최고의 권좌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정치에 입문해서도 ‘여의도 무대’의 비주류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는 공통분모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여의도 현장정치에서 개인적 친분을 나눈 인연은 거의 없다. 이 대통령이 14대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노 전 대통령이 13대와 15대 의원이었으나 공교롭게 그 시기는 어긋났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부산 동구에서 통일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첫 금배지를 달았으나 이 대통령이 1992년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초선 의원이 됐을 때 대선도전에 실패했다.

두 사람은 재선을 향한 길목이었던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신한국당과 민주당 후보로 승부를 겨뤘 이 대통령이 1위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국민회의 이종찬 후보에 이어 3위 득표로 낙선했다. 그러나 2년뒤 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내놓은 뒤 보궐선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당선돼 의원을 넘겨받았다.

이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인연은 참여정부 출범후 대통령과 서울시장 자격으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으며, 특히 지난 2005년 6월 1일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에는 노 전 대통령 내외가 직접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였던 두 전·현직 대통령은 지난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대결국면에 접어들었다.

대선정국 말기 한나라당이 여권의 ‘이명박 죽이기 플랜’ ‘청와대 공작정치’ 등을 주장하자 청와대는 “구대정치의 전형”이라 비난하며 이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참여정부 인사들의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신·구 권력의 대립양상이 이어졌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28일 청와대 만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의전은 아직 제가 가운데로 돼 있나 보다”면서 당시 당선인이었던 이 대통령의 자리를 가리키며 “다음에 퇴임후에 (청와대에) 오는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자리에..”라고 농담했으나 영영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왼쪽) 28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28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왼쪽) 28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盧 전 대통령 서거 한점 의혹 없다”

盧측, 음모론 차단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음모론을 차단하는데 적극 나섰다.

사건의 본질을 흐려 고인의 유지를 훼손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친노 인사는 28일 경찰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을 당일 수행한 경호관이 마지막 순간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심적 부담감 등으로 초기에 사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숨긴 것으로 본다”며 “경호관 개인의 지엽적 문제로, 본질이 변하

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인터넷 일각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대해서도 “유서 등으로 볼 때 노 전 대통령 서거가 본인의 의지로 이뤄진 일이라는 데 한 점 의혹이 없다”며 “(경호관 진술 반복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사실관계가 밝혀진 마당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확산시키는

것이 고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금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천호선 전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경호관의 최초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경찰이 뒤늦게나마 사실관계를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찰 “혈흔·머리카락 盧 전 대통령 것”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경위를 수사하는 경남경찰청은 28일 “부엉이 바위 아래 2곳에서 채취한 혈흔은 노 전 대통령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있는 나뭇잎과 바다에 떨어진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겨 감정 결과, 노 전 대통령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수거한 60여 개의

머리카락도 국과수에 의뢰해 감정된 결과, 노 전 대통령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서거 당일 현장에서 수거한 상의와 등산화에 묻은 피도 노 전 대통령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에 유포되는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장소에 혈흔이 없었다’는 소문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나는 한 사람으로 늘 가까이 계셨던 분상이기때
달성이 이루고자했던 그곳, 그 피서, 그 웃소리를 데살은 기억할 것일시다
당신의 오해했던 그곳을, 오대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